대안신당,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터' 부상

'과반 열쇠' 쥔 10석…창당 전 존재감 부각 기대감

심상정 "여야 4당+대안신당 논의의 틀 만들어야"

호남 기반의 대안신당이 내달 초 막오를 '패스트트랙 대전'에서 '캐스팅보터'로 부상할 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월3일 검찰개혁 법안 부의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표 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몸값'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연내 창당을 목표로 하는 대안신당은 신당의 명운을 걸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역할을 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재적 과반(296명 중 149표)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인 대안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부 이탈표가 없다는 전제하에 더불어민주당(128석)은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친(親) 민주당 성향 무소속 5석(문희상 국회의장, 김경진·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140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신당을 우군으로 확보하면 총 150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이나 민주평화당의 조력 없이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과 대안신당의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안신당은 이런 상황을 창당 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겠다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뒤 곧바로 여세를 몰아 창당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패스트트랙 협조'를 지렛대 삼아 선거법 개정안 내용 수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 기반의 대안신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7석 가량의 호남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은 오는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도 '농어촌 의석 사수'를 천명하며 패스트트랙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낼 것"이라며 "정국을 이끄는 '리딩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며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민주, 21대 총선 후보자검증위원회 설치

젠더폭력·혐오발언 검증TF, 2030·여성으로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기본 자질·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를 오는 17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총선 관련 기구 구성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증위는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를 절반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혐오·젠더폭력 검증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해 관련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TF는 2030 청년 50%와 여성 50%로 구성해 젊은층과 여성의 시선으로 젠더 폭력이나 혐오 발언(전력)이 있는지 검증한 뒤 검증위로 (심사내용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17일까지는 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의 50%를 외부인사로 채운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 6일까지는 공직자후보자추천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 후보자추천위원의 절반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내년 2월 15일까지는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선거제도 논의를 위해 (설치시기를) 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21대 총선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한 입후보자들은 검증위의 자격심사와 예비후보 등록 등을 마친 뒤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교육 ▲교양 ▲전문교육으로 나뉜다. 기본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양 부문에서는 품격있는 정치언어 구사법,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소수 배려 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당정, 檢 직접수사 축소·장관 수사보고 강화

이인영 "檢개혁 돌이킬수 없어"

김오수 "합리적 방안 마련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신속한 개혁 추진에 공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37개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차관은 검찰의 장관 보고가 강화될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단계별로 이를 보고해야 해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황주홍,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시사회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14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광온 의원, 김동철 의원과 함께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의 국회 시사회를 개최했다.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김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 망명에도 불구하고 15대 대통령에 취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故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황 의원은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저 역시 아태평화재단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그은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유승민 "변혁의 1막 끝났다" 대표직 사퇴

새 대표는 오신환 의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14일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변혁 비상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변혁의 1막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신당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변혁도 새 모습으로, 젊은 대표와 공동단장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대표로서의 역할은 오늘로 끝이지만, 변혁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은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30일 변혁 대표로 추대된 유 의원이 45일 만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자신이 보수통합의 파트너로 지목된 상황에서 신당 창당에 나선 변혁의 대표를 계속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1970년생인 오신환 의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젊은 정당' 이미지를 심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오 의원은 "우리 정치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30-40대 중심이 돼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